

# 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, **천년 전북!**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 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  
<http://www.jthink.kr>

**보도시점:** 2019년 12월 30일(월)부터

· **문의**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  
(063-280-7111)

· **담당** : 사회문화연구부 최윤규 부연구위원  
(063-280-7180)

새만금연구센터 김보국 선임연구위원  
(063-280-7161)

## 전북, 농촌비점 저감 선도해야

### 전북연, 농어비점 저감기법 적용 및 중간지원조직 제안

#### 불임. 농촌 비점관리 정책 변화와 전라북도의 대응 원고

-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물환경 정책 변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- 전북연구원은 30일 이슈브리핑 '농촌 비점관리 정책 변화와 전라북도의 대응'에서 중앙부처의 환경정책의 변화로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농도인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.
- 비점오염원은 도로와 산, 농 밭, 공사장 등 불특정한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먼지와 기름, 비료, 퇴비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다.
- 농림부는 영농행위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비점 관리에 나섰다, 환경부도 농업지역 비점오염 감소 방안을 강 유역에서 오염 총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반영했다.

- 연구원은 농업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지역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경작방법을 농업비점 저감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.
- 농업비점 저감기법은 농지에 투입되는 비료와 퇴비 등을 적절량을 사용하여 수확량에 변화가 없지만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.
- 또한 총량제에서 오염 삭감량을 인정한 개인활동 19개와 공동활동 12개를 농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 더불어 이러한 활동들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도 제안했다.
-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해 참여 거버넌스와 행정 거버넌스를 운영할 중간지원조직 구성도 제안했다.
- 연구 책임을 맡은 최윤규 부연구위원은 “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시설 설치로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없다”며 “도민들이 비점오염원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태도변화를 이룰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- 공동 연구를 진행한 김보국 선임연구위원은 “전북은 내년부터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‘농민공익수당’ 지불한다”며 “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에 농촌비점 저감기법이 의무준수로 부여될 것”으로 예상했다.